

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20. 1. 29.(수) / 총 3 매
담당 부서	주거복지정책과	담당자	· 과장 김석기, 사무관 박승연, 주무관 장휘량 ☎ (044)201-4740, (044)201-4868
보 도 일 시		2020년 1월 3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9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쪽방·비닐하우스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, 공공임대주택 신청·이사·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.

**국토부,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·사업착수
정부·지자체·내 함께, 희망자 발굴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 지원**

- 쪽방, 고시원,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이주과정 전반을 밀착 지원하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광역시·도와 기초자치단체(시·군·구)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·선정한다고 밝혔다.
 -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 「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」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,
 -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상담을 실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,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.
-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, 사회복지관, 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하여 쪽방 등

비주택거주자 밀집 지역 현장방문, 주거복지 정보제공,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하고,

-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임대주택 물색·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하여 인근의 매입·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.

〈 비주택 거주자 주거사향 지원사업 절차 〉

수요발굴 (지자체)	임대주택 공급(LH)	이주·정착지원 (기관협업)
▶ 비주택 방문 상담 (쪽방상담소, 주거복지센터,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업) ▶ 희망자 발굴	▶ 1:1 주거지원 상담 ▶ 주택물색·신청 지원 ▶ 생활집기 빌트인	▶ 무(無) 보증금 ▶ 이사비·생필품 지원 ▶ 자활·돌봄 서비스 연계

□ 이주·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·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이사비·보증금·생활집기를 지원하고

-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, 복지부와 협업하여 자활 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.

※ 공공임대주택 이주자 정착 및 자활지원 방안

◇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(LH)-복지부(자활복지개발원)가 협업하여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

* 국토부·LH공사(공공임대주택 공급) → 복지부·자활복지개발원(자활사업총괄) → 광역·지역자활센터(사례관리사 배치·생활관리)

- 집중 사례관리* 희망 가구에게 가사·간병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 근로,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(복지부, 자활복지개발원) 추진

* 자활복지개발원 수행(광역센터 14개소 170명, 지역센터 250개소 1,489명 운영)

-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·지자체·LH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고
 -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과 함께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, 他 공모사업 가점 부여, 재정 인센티브·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“정부·지자체,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히고
 - “주거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주거상향 지원사업 개요

- (사업내용) 쪽방·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이주·정착지원
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·사회복지관·행정복지센터 등 지역복지역량을 활용하여
① 주거복지 프로그램 홍보, 방문상담 ②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
③ 임대주택 입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
- (시행기관)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를
대상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자체
 - (광역 관리형) 시장·도지사, (기초 관리형) 시장·군수·구청장
- (사업대상) 쪽방 등의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
- (사업예산) 중점 관리지역* 당 1억원 이내로 국비를 지원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박승연 사무관(☎ 044-201-474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